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대관업무 추진 ③

자료제공/이석규[765kV중부건설소 부장]

4.4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표 1과 같다.

4.5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설명회는 '97. 7. 21자 한겨레신문(중앙지)과 경기일보(지방지)에 공고하여 '97. 7. 28 ~ 8. 1(5일간)까지 8개소에서 시행하였으며 가평군에서는 신가평 변전소 위치변경을 요구하며 설명회를 원천 봉쇄하여 개별설득을, 신안성 변전소건설에 정인 안성군은 설명회 개최거부로 옥외에서 시행하였으며 설명회 개최 예는 다음과 같다.

- 주민의견 수렴 및 답변(표 2)

5. 주민의견 수렴

5.1 환경부의견

- 한강환경관리청

- ① 환경부고시 제1995-70호('95. 6. 26)의 "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종 평가서가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② 철탑부지조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생태 계파괴 등의 영향 방비책

철탑예정지에 대하여는 임상현황도 작성 제시 및 녹지8등급 이상 지역은 훼손이 안 되게 강구대책, 특히 태화산은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대상지역으로 구체적인 보호대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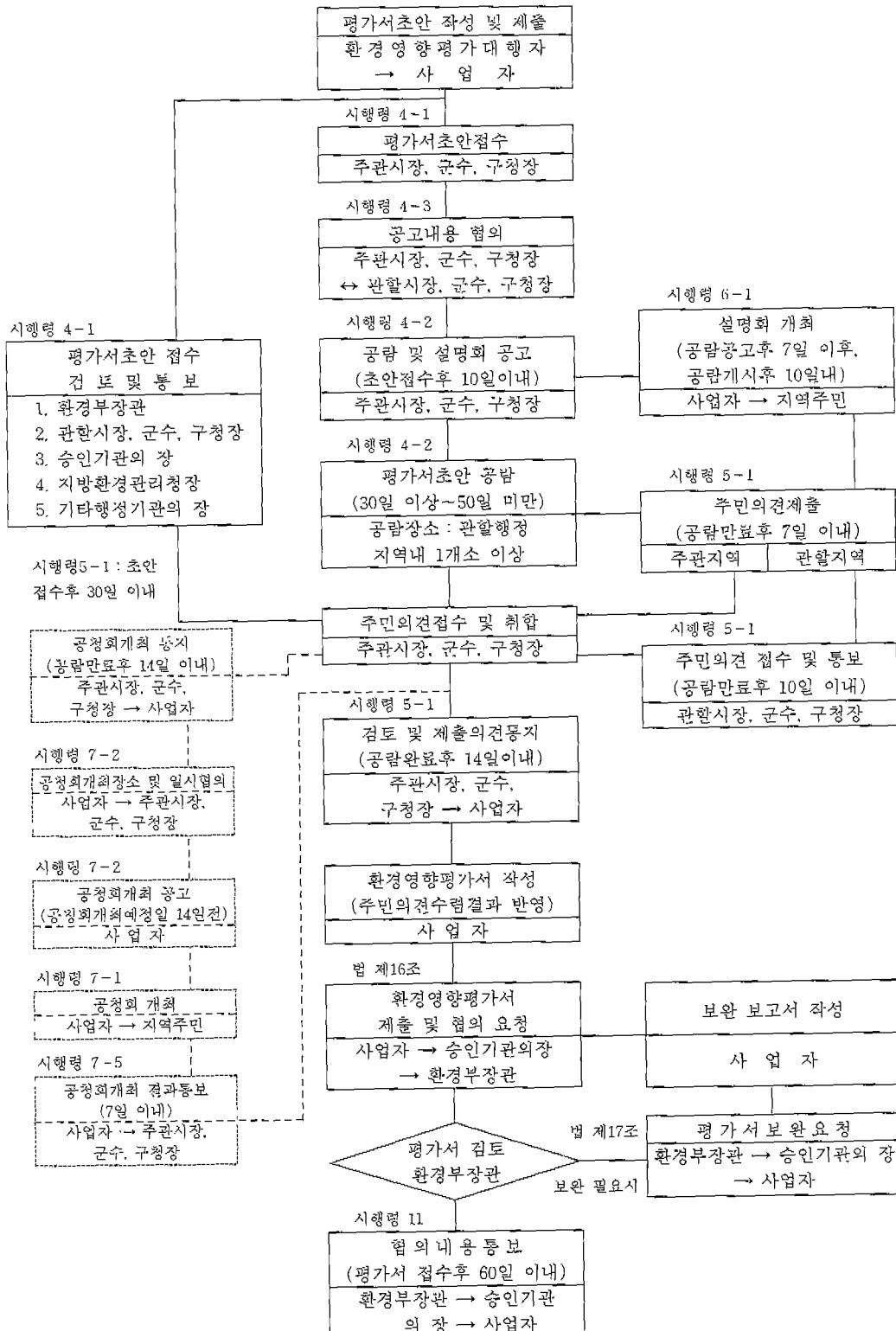
- ③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검토
- ④ 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통과시 토사로 인한 수질보호 강구
- ⑤ 소음저감대책 및 소음기준치 초과예상지역에 대하여 방지대책 강구
- ⑥ 송전선로 주거지역에 인접 통과시 최대한 이격(100m 이상) 시켜야 하고 불가피한 곳은 적정방지대책 강구
- ⑦ 철탑설치시 주변 위락·경관 보존대책 제시 문화재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보호 대책 수립

- 원주지방환경관리청

- ① 철탑설치 및 진입로 개설시 훼손되는 지점의 현황과 면적제시, 환경피해 저감방안 및 복구대책 제시
- ②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에는 최대한 보존하는 방안 강구, 사업수행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태계 혼란도 예측하여 보호대책 강구
- ③ 공사시 토사유출 및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의한 수질오염 고려, 구체적인 저감대책 제시
- ④ 송전선로경과지는 마을과 충분히 이격하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대관업무 추진

▲표 1▲ 환경영향평가 절차



<표 2> 주민의견 수렴 및 답변

주 민 의 견	답 변 사 항
<p>♣ 철탑은 몇번지 어디에 지나가는지? 는. 밭이 몇평인지? 철탑높이, 길이, 선로, 주변의 뭔가는 몇가구가 되는지? 거리는 얼마나 이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p>	<p>선로는 총 길이 79.2km이고 철탑위치는 기본설계과정 이므로 기본노선만 결정되어 있고, 철탑이 어느 위치 에 있는지는 축량을 해야만 정확한 위치파악이 된다. 철탑높이는 평균 95m이고, 경간은 평균 500m이다. 축량이 끝나면 철탑위치가 결정되고, 기타 팜플렛을 참고하기 바라며 용인시는 18.2km이다.</p>
<p>♣ 송전선로가 지나간으로써 장·단점을 설명해 달라.</p>	<p>장·단점은 TV시청에서 보았듯이 여름에 전력수요가 너무 많아 병원, 기타 관공서에서 전력부족으로 급증 하는 전력수요의 공급 및 필요성이 제기되며, 안정적 인 전력공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VTR에서 보았듯이 자연, 생태계에서 문제점 이 조금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후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p>
<p>♣ 송전선로통과시 소, 돼지에 있어 문제(암유발 및 백혈병)가 된다.</p>	<p>송전선로 경과에 대해서 동·식물상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향력은 없다. 미국, 캐 나다, 일본에서도 그런 자료(팜플렛 참고)가 나왔으며 별도로 설명하겠다.</p>

전파장해 정도 및 피해해소 방안 제시

- ⑤ 송전선로의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제시

5.2 시군별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종합(표 3)

주민의견을 제출한 112명 중 90명(80%)의 주민이 송전선로 반대 및 우회의견을 제시하며 ①전자파의 불투명성 제기(9%) ②지역발전의 저해(5%) ③선로주변의 지가하락(6%) 등 송전선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자기 거주지역에 송전선로를 설치하는데 있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5.3 주민의견의 해결방안

송전선로 건설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과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조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료와 확고한 신념 및 철저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적극대처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6. 결 론

송전선로의 최적 경과지선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한전의 자세와 선로경과의 타당성, 즉 GIS를 이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경과지선정 방법을 부각함으로써 지역주민 이해를 도모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측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를 바탕으로해서 개발주체인 한전과 지역주민들간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전력공급의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전기산업의 주체로서 송전선로의 건설을 주민과 사업자인 한전이 공동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대관업무 추진

<표 3> 시군별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종합

(1997년)

시 군 명	개최일시	설명회개최지	인 원	주 민 의 견
용인시	7. 28	양지면사무소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 인체 및 동식물 유해 - 지가하락으로 재산상 피해 - 아시아나C.C를 관통하여 죄선으로 경과지 변경요구
안성군	7. 28	고삼면사무소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군수 설명회 개최 거부로 면사무소 유희에서 설명
이천시	7. 29	신둔면사무소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예관광단지 경과유무 - 전자파 유해론
광주군	7. 30	실품면사무소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후지역 송전선로 건설하면 더 큰 지역발전 저해 주장 - 골프장 건설반대 주민 집결
		퇴촌면사무소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로 경과지 우회 요구 - 지가하락으로 재산상 피해 - 부락단위 설명회 요구
가평군	7. 31	설악면 가일1리 마을회관	1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150여명 집단시위 - 개별적으로 면담 설명
여주군	8. 1	삼복면사무소	1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 유해론 - 종교부지(천진암)로 경과지 우회 요구
양평군	8. 1	군청 대회의실	2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주택단지계획 전망으로 경과지 변경 요구 - 군 작전지역 송전선로 못 갈 이유없다고 주장 - 부락단위별 설명회 요구
8 개 소		약 260 명		

송전선로 주변의 전자파 -

송전선로 이격거리 길어 전자파영향 미비

각종 전력설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다른 분야의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에 비해 비교적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학설이 모아지고 있다.

송전선로 이격거리에 따라 전자파 크기가 다른데 한전에서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설계·시공하므로 전자파 영향은 미비하다.

또한, 송전선로의 전자파는 파장이 매우 길어 전자파가 인체나 동물에게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줄 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여러건의 동물실험결과 전력설비 전자파와 동물 유해성은 관련이 없으며, 변전소 직원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의 비교적 높은데 건강검진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전자파는 발생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세기가 급격히 감쇄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가정에서 송전선로의 전자파 세기는 무시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의 전자파는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비교할 때 노출빈도, 전자파세기가 적다.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전력설비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전에서는 충분한 이격거리의 확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주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 환경타임즈